

#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 하향...회계부정 감시 약화 우려

### 광주시의회,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증 기관 세무법인까지 확대 상임위 부결안 본회의 통과...조례안 절차·재정 통제 실효 논란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대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 수준으로 낮추고, 검증 주체도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결산서 검사'는 제출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확인해 지출 내역이 형식적으로 맞는지 검토하는 수준이어서 회계부정을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9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귀순 의원(광산 제4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회계감사가 재무제표 전반을 검토해 추진 사업의 내용과 지출 타당성까지 확인하는 반면, 세무사는 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사업에서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내부거래 등 회계부정을 실질적으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병민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 검사로 명칭과 수준을 낮춰 조례가 개정된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과 감독 수준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타 자치단체에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광주는 사실상 검증 수준을 낮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제

도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국회도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이번 조례안의 처리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338회 정례회 기간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세무사와 회계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시민적 공감대가 약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귀순 의원은 시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처리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회계감사 보고서가 아닌 정산검증 보고서가 상용화돼 왔다"며 "정산검증 보고서는 세무사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민간위탁사업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에 따라 집행되므로 매뉴얼대로 사용됐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도 검증 기회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회계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까지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자위 소속 의원 4명이 상임위에서 직업간 이견이 팽배해 확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부결된 것이기에, 전체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자는 취지로 의원 서명을 받아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고 주장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전남 쌀 사랑해주세요" 농협전남본부는 최근 KTX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고품질 브랜드 쌀(500g)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전남도, 광주시, 농협 RPC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나명주 기자 mjna@

##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앞두고...광주 '자치구 명칭 변경' 목소리

### 지역 정체성 반영 요구 확산... "자치권 강화 필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동·서·남·북·광산 등 5개 구로 명명된 기존 5개 자치구의 이름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주 5개 자치구를 독립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춘 '거점 일반시'로 전환해 전남 시·군과 대등한 행정 구조를 갖추자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는 최근 '광주 5개 자치구 일반시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행정적 형평성과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의 자치구 체제를 유지한 채 통합될 경우 구민들에게 행정적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어 "북구는 AI·광산, 광산구는 미래, 서구는 행정·금융, 남구는 에너지·교육, 동구는 의료·문화 중심지로 특화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 역시 여러 차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방향의 행정통합을 위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의 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5개 구청장들 또한 지난 8일 '행정통합 특별법 자치구 의견 반영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자치구 위상 강화를 위한 명칭 변경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광주에서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구 중심의 행정구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미

래 가치를 반영한 지명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택 동구청장은 "금남로와 충장로가 각각 금남군 정충신 장군의 군호와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시호에서 유래한 것에 비하면 '동구'라는 명칭은 다소 낯설다"며 "'무등구', '충장구', '서석구' 등 대안이 충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북구와 광산구는 인구가 40만 명 안팎에 달해 단순한 자치구 체제로는 지역 규모와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필순(광산 3선거구) 광주시의원은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자치구 경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광주 내부의 자치구 경계 조정 문제는 10여 년째 답보 상태"라며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자치구 조정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광주시, 일상 지키는 '안전망' 대폭 넓힌다

### 성범죄 피해·군 복무 상해 보장 강화

광주시가 시민안전보장 항목에 성범죄 피해 지원을 새로 포함하고 군 복무 상해 보장도 강화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1년 동안 새롭게 적용되는 '2026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3000만원가량 증액된 3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갱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신설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화재 및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존 항목과 스포츠 부상 치료비 등을 합쳐 전체 보

장 범위가 총 14개로 대폭 늘어났다. 그동안 5개 자치구와 겹치는 보장문제도 정리했다.

시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상해보험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직업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고 현역병이나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등으로 입대하면 자동 가입되는 이 보험은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000만원, 입원 일당, 수술비, 골절 화상 진단금 등을 폭넓게 지원해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군 복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고된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 100만 원을 새롭게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이 보험은 다른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제도 모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43억원 투입...광주시, 산후 회복·신생아 양육 지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가 43억여원을 들여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총 43억 1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마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찾아가 산모 건강 회복, 신생아

돌보기, 가사 활동 등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다.

기본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지만, 둘째 아이나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및 장애인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등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미숙아에 한해서만 서비스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등에 따라 10일에서 최대 25일까지며, 하루 8시간 주 5일 제공이 원칙이다.

지원금은 단태아 첫째 116만 5000원부터 네쌍둥이 이상 1860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돼 태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현재 지역 내 21개 기관 소속 684명의 인력이 활동 중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 안에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